

# 41 <sup>호</sup>

---

## 문화예술 분야

### News Clipping “만”

2026.01.26.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 주요목차

---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 1

---

##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K컬처는 세계적 성과로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됐지만, 그 성장이 지역과 창작자의 보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문화의 확장이 사람과 지역을 함께 살린다는 확산을 정책과 제도로 증명하는 일이다.

- K콘텐츠 호감도 최고·유학생 급증 속, 일상문화로 확장되는 ‘지속형 K컬처’ 전환 국면
  - “한국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국가 호감도 82.3% ‘역대 최고’(헤럴드경제, 2026.01.20.)
    - K콘텐츠 영향으로 외국인 한국 호감도가 82.3%로 역대 최고, 중동·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에서 호감도 높아
  - ‘이제 일본 안 가요’...돌변한 외국인 유학생들, 무슨 일이(한국경제, 2026.01.15.)
    - 외국인 어학연수생 5만8,764명(20%↑), 미주 유럽 51.6% 증가, TOPIK 56만 명 응시로 서울 ‘갭이어’ 급부상
  - [K웨이브3.0]③“대중문화는 화려한 분수...‘일상문화’ 흘러야 30년 간다”(아시아경제, 2026.01.19.)
    - K팝 등 대중문화는 진입로일 뿐, 일상문화로 스며들어 현지 맥락과 마니아를 키워야 K컬처가 30년 이상 지속 가능
- 문화재정 확대와 기초예술 지원 강화 필요성 커지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함께 제기
  - 李大통령,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대전략 제시(한국NGO신문, 2026.01.21.)
    -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문화예산 9.6조를 포함해 지방·문화·안전·평화 등 5대 국정전략 제시
  - 金총리 “기초예술 튼튼해야 K컬처 지속 가능...정책 전환 필요”(뉴스1, 2026.01.20.)
    - 기초예술 지속성을 위해 공연 실적 중심을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 필요
  - 李 “빛 없는 문화예술 추경” 주문에...요건은 미비 재원은 난망”(뉴시스, 2026.01.22.)
    -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을 언급했으나 요건상 어려워 기금 운용 변경·예비비·기정예산 이전용 등 우회 자원이 거론
  - 중기부·문체부·해수부, 4조 4000억 규모 벤처펀드 만든다(뉴스1, 2026.01.23.)
    - 문체부 IP·문화기술·영화 분야에 4,990억 출자, 총 7,318억 규모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
- 수도권 광역문화경제 축·지역 K-컬처 산업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 이재명 대통령 “인천·서울·경기 일대 문화·경제수도 육성”(인천투데이, 2026.01.21.)
    - 수도권을 문화·경제수도로 육성하고 광역통합 지역에 연 5조·4년간 20조 원 지원 구상 제시
  - 전주시, 문화·경제 어우러진 ‘K컬처 산업도시’ 만든다(머니S, 2026.01.20.)
    - 팔복동 미래문화기지·AI VFX 구축 등으로 영화·미식·스포츠 연계한 K컬처 산업도시 조성 추진
- 문화지구·진흥지구 지정 확산...공간 규제로 산업·콘텐츠 경쟁력 강화
  - ‘핫’ 플레이스 성수, 앞으로 얼마나 더 핫해지려나...서울시, 성수 문화콘텐츠 진흥지구로 선정(livebiz, 2026.01.22.)
    - 서울시는 성수를 문화콘텐츠, 양재개포를 ICT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계·광역·지역 등 인센티브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전주시, 문화지구 지정...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노컷뉴스, 2026.01.20.)
    - 전주시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과 관리 기준 도입
- 도시·관광·축제까지 ‘체류형’ 전환 열풍...지역 체류경제 전략 본격화
  - 밀양시 ‘체류형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한다(경남도민일보, 2026.01.19.)
    - 밀양시 연극·무형유산 거점에 1,000억 원대 투자로 체류형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
  -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는 순천...‘치유’ 중심 체류형 전략 가속(베타뉴스, 2026.01.16.)
    - 순천 320억 원 갯벌치유 플랫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 ‘치유’ 경험 강화
  - 경남, 남해안 ‘한국형 칸쿤’ 전환 시동...체류형 인프라·콘텐츠·해양스포츠 3대 전략 가동(해사신문, 2026.01.16.)
    - 경남 남해안 체류형 해양관광 전환 추진...통영 1.14조, 거제 1.5조 투자로 ‘한국형 칸쿤’ 조성
  - 진해군항제, 체류형 콘텐츠 강화로 화려하게 도약한다(아시아경제, 2026.01.22.)
    - 진해군항제, 3.27~4.5 개최...뮤직페스티벌·브랜드페어 등 체류형 콘텐츠 강화
- 청년 유출·인구감소 가속 속 지방소멸 경고...대도시 자원집중
  - 충남 지역 소멸 위기 심화 경고음(투데이충남, 2026.01.21.)

- 충남 15~18세 청소년 전출 7,984명(도내 4,955·도외 3,029)으로 천안 2,418·아산 1,380명 유출
- 비수도권 10곳 중 7곳 “지방소멸 위험 높다” 가장 큰 원인은?(더나은경제, 2026.01.19.)
  - 비수도권 지자체 77%가 지방소멸 위험 ‘높음 응답’·원인 1위는 일자리 부족, 정책 효과는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로 평가
- ③혁신도시 14개 시군구 중 ‘9곳’ 정주 인구 줄었다(머니S, 2026.01.21.)
  - 공공기관 153곳 이전에도 혁신도시 14개 시군구 중 9곳은 인구가 줄며, 정주·산업 기반 한계가 드러
- 학생 줄고 학교 닫히는 경북…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 재촉한다(영남일보, 2026.01.20.)
  - 경북 학생 1년새 1만246명↓, 학교 35·학급 307 감소…영덕 유치원 20명 등 소멸 가속
- 지방소멸 막으려면…“소수 도시 자원 집약”(전북일보, 2026.01.21.)
  - KDI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을 소수 대도시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원 집약 필요

○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확산…교육·문화 앵커로 재생 전략 부상

- 학생 줄자 학교도 사라진다…경북, 올해만 36곳 폐교(코키뉴스, 2026.01.20.)
  - 학령인구 감소로 경북서 올해 유치원·초·중 36곳 폐교, 학생 1만여 명·학급 307개 감소하며 학교 구조조정 가속
- 폐교 후 8년…활용방안 못찾는 대구 도심 경신정보과학고 건물(연합뉴스, 2026.01.16.)
  - 대구 도심 옛 경신정보과학고가 폐교 후 8년째 방치, 건축물대장 미등재로 공공 활용이 어려워 활용 대책이 시급
- ‘홍물’ 취급 받던 폐교, 지역 심폐소생할 ‘앵커 시설’로 부활... 2026년 골든타임 맞나(교육을베추다, 2026.01.19.)
  - 폐교 무상 대부 허용(최대 10년)으로 방치된 학교가 지역 재생을 이끄는 문화·교육 앵커 시설로 전환
- ‘에코스쿨’로 재탄생하는 공진중 폐교부지…올해 12월 개관 목표(뉴시스, 2026.01.22.)
  - 서울 강서구 공진중 폐교를 227억 투입해 ‘에코스쿨’로 재생, 생태·환경 교육 거점으로 2026년 12월 개관 예정
- 문화·예술·체험중심 특색있는 학교 ‘생존전략’(충청투데이, 2026.01.22.)
  - 충북 작은학교들, 문화·예술·체험 특화 교육과 지원금으로 학생 유입하며 생존 모색

○ 국토균형발전 가속 속 광역통합 추진…재정분권·자치권 이양 요구 확산

- 李 “5극 3특으로 국토 균형발전”…野단체장 “재정·행정·개발 3대 권한 달라”(문화일보, 2026.01.21.)
  - ‘5극3특’ 광역통합 추진에 야권 단체장들 “현금 인센티브보다 재정·행정·개발 권한 이양” 요구
- 7:3까지 국가재원 지방 이양…방안 마련 착수(금강일보, 2026.01.18.)
  -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5:2.5에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
- ‘20조’ 통합특별시, 자치권 이양은 미흡(부산일보, 2026.01.18.)
  -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제시, 부산·경남은 자치권 이양이 미흡하다고 비판

○ 재정 격차 속 지방 책임 전가 가속…이양은 늘고 재정 지원은 줄어

-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좁혀지지 않는 재정 격차(부산일보, 2026.01.22.)
  - 수도권 지방세 61.5조(53.9%) 집중, 서울 27.4조 vs 부산 6.7조로 재정격차 심화
- 지방 이양된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내년부터 국비 중단”(제주일보, 2026.01.14.)
  - 농촌 유희공간을 문화·소득시설로 재생해온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2027년부터 국비 지원 중단

○ 쇠퇴한 구도심, 규제 완화와 문화거점화로 재생 전환

- “원도심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여야 37명 ‘원도심 지원 특별법’ 공동발의(이데일리, 2026.01.20.)
  - 여야 의원 37명이 원도심 특별법 공동발의, 용적률 최대 200% 완화·각종 부담금 감면으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 추진
- “축적 아닌 일상으로”…제주 원도심 버스킹 상설 전환(뉴시스, 2026.01.20.)
  - 제주사서귀포 원도심 2곳(심도동·서홍동)에 연중 상설 버스킹 도입하고, ‘제주인들’ 플랫폼으로 공연 정보·참여 신청을 통합 운영
- 순천시, 원도심 빈 건물을 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활용(서울경제TV, 2026.01.16.)
  - 순천시 원도심 빈건물 모집해 콘텐츠 창작기지 조성…작년 18동·35실 리모델링, 28개 기업 입주
- 빈 점포를 팝업 문화공간으로…부산대, 상권재생 실험(국제신문, 2026.01.20.)
  - 부산대는 1월 5~31일, 부산대 앞 유희 상가에서 4주간 주제별 팝업 문화공간을 운영하며 빈 점포 상권 재생을 실험

○ 로컬 콘텐츠로 상권·관광 전환…체험·체류 중심 지역전략 부상

- 인천연구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활용해야”(2026.01.15.)

- 인천연구원 로컬크리에이터를 체험경제 주체로 육성해 지역자원 연계 상품으로 상권 활성화 제안
- [아트투어, 강원도의 지도를 새로 그리다]④ 관광지에서 예술 기지로의 변신(강원일보, 2026.01.19.)
  -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으로 서울~속초 99분 시대가 열리며, 강원도는 예술 레지던시로 체류형 관광 모색
- 마을여행 로컬 콘텐츠 개발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제주매일, 2026.01.15.)
  - 제주시 로컬 콘텐츠 개발 5,000만 원 등 총 4억2,000만 원을 투입해 마을여행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시도
- 유희공간·로컬굿즈 결합으로 생활문화 유통 확장, 지역 기반 문화소비 거점화 시도
  - 유희 공간의 새로운 발견... 마포아트센터 팝업 공간 'SPACE M'(뉴스저널리즘, 2026.01.23.)
    - 마포아트센터 유희공간을 팝업 'SPACE M'으로 전환, 독립서점 LP숍사진전 등 지역 콘텐츠 3개 프로젝트로 생활문화 공간 확장
  - "강릉지역 공예품 다 있어요"...'굿즈임당' 개점(스포츠조선, 2026.01.23.)
    - 강릉 임당센터에 로컬 굿즈숍 개점, 22개 업체 참여, 공예·로컬상품 판매 및 2주 할인 행사 운영
- 예술인 권리 사각지대 지속...산재·정산 제도 개선 요구 확산
  - "노동자 아니고 책임은 혼자? 예술인 산재보험 기만 프레임 바꿔야"(미디어오늘, 2026.01.18.)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로 하락해 사실상 무력화
  - "영수증 지옥 대신 창작을"...제주 예술인들, 정산 시스템 개혁 나선다(국제뉴스, 2026.01.18.)
    - 제주 문화예술 정산 문제 개선을 위해 예술가들이 TF를 꾸려 세미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추진
- 사교육비 급증 속 소비는 AI·연결 중심으로 재편...2026 소비구조 전환 신호
  - 2026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한국경제인협회, 2026.01.22.)
    - 사교육비는 10년 새 18.2조→29.2조원으로 60% 증가, 초등생 월평균은 44만원으로 90% 급등
  - 대한상의, '소비 트렌드 보고서' 발간..."유통의 본질은 연결"(서울경제TV, 2026.01.21.)
    - 대한상의는 2026 유통 트렌드로 C.O.N.N.E.C.T를 제시하며 '연결 경쟁'을 핵심으로 진단
  - 신한카드 "올해 소비트렌드 'WISE UP'...AI 대전환 대비"(아시아경제, 2026.01.21.)
    - 신한카드는 2026년 소비 트렌드로 AI 활용·합리적 소비 확산을 담은 'WISE UP'을 제시
- 2026년 소비 회복 기대 확산...국민 절반 이상 지출 확대 전망
  - 2026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한국경제인협회, 2026.01.22.)
    - 국민 54.8%가 2026년 소비 확대 계획, 소비여력 부족 응답 41.2%로 충분(8.3%)의 약 5배
- '문화가 있는 날' 주간화 속도전...참여는 늘었지만 지역 운영·콘텐츠 공백 우려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문체부 개정령 입법예고(연합뉴스, 2026.01.20.)
    - '문화가 있는 날'이 월 1회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참여율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로 상승
  -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지역은 준비됐나(전북일보, 2026.01.20.)
    - '문화가 있는 날' 월→주 확대, 관람객 29.6%↑·1,510만 명 혜택, 지역 준비 부족 우려
- K-공연 글로벌 도약 원년 속 성과·확장·흔선 교차...질적 전환과 체험화 과제 부상
  - [2026 전망보고서] 1.7조 시장의 질적 진화, 'K-공연'의 글로벌 원년 될까(데일리안, 2026.01.09.)
    - 공연시장 1.7조 성장 속 정부 지원 급증으로 K-공연 해외 진출 원년, 안착 과제가 관건
  - K컬처 또 일냈다...칼군무 '일무' 베시어워드 수상(연합뉴스TV, 2026.01.21.)
    - 서울시무용단 '일무'가 뉴욕 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자상을 수상, 국공립 예술단체 최초 기록
  - 노래 없는데 뮤지컬?...이상한 '장르 세탁'(SBS뉴스, 2026.01.18.)
    - 연극을 뮤지컬로 판매하는 '장르 세탁'이 확산되며 관객 혼란과 공연시장 통계 왜곡을 낳아
  - 인천연구원 "지역 공연예술 '체험 경제'로 전환해야"(인천일보, 2026.01.19.)
    - 인천연구원 지역 공연예술을 관람에서 체험형으로 전환 필요 제언
- 미술시장 양극화 속 전통 재발견·도시형 미술관 확장...정체성·공공성 논쟁
  - 지난해 미술시장, 검증된 작가 작품만 살아남았다(매일경제, 2026.01.21.)

- 지난해 미술시장은 경매액 5.16% 증가에도 고가 블루칩 쏠림으로 양극화 심화
- 민화에 담긴 조선의 '해학과 풍자'...K컬처 중심됐다(한국경제, 2026.01.20.)
  - 민화·궁중화 27점 전시, 까치호랑이 굿즈 9만 개 판매로 민화의 K-컬처 부상
- 부산미술인 풍피두 분관 유치 반대..."예술은 개발의 장식 아니다"(뉴스핌, 2026.01.20.)
  - 부산미술인 서명 500명 돌파, 26개 갤러리 릴레이 전시로 풍피두 분관 유치 반대, 문화주권 침해 우려 제기
- 피렌체, 도시 전체를 잇는 새로운 미술 산책로(ARTKOREATV, 2026.01.23.)
  - 피렌체 7개 박물관 통합, 미켈란젤로 중심 도시형 미술관 구축·통합권 38유로·72시간, 연 200만 명 분산 유도

○ 지역축제의 산업화 가속...국비 확대·연중화 전략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엔진' 전환

- 지역축제, '지방 잔치' 넘어 '글로벌 관광 산업의 핵심 기지로...'2023~2027 문화관광축제의 비전과 전략(KtN, 2026.01.23.)
  -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신규 7·재지정 20), 국비 각 4천만 원, 총 예산 65억→104억 원 확대
- '겨울의 문화'가 산업이 되는 순간...축제·전시·여행·콘텐츠의 재편(미디어피아, 2026.01.10.)
  - 겨울 축제전사로 겨울여행 확산 속 문화가 취향을 넘어 산업 정책 영역으로 재편되고, 수익배분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
- 보령머드, 연매출 15억 대표 산업 성장...축제 넘어 세계로(뉴스티엔티, 2026.01.21.)
  - 보령머드 30년간 축제 연계 성장으로 연매출 15억 원, 관람객 135만 명·수출 187만 달러 기록하며 K-머드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
- 축제를 산업으로...여주시 문화행정, 지역 경제 지형 바꾼다(경기일보, 2026.01.14.)
  - 여주 축제 방문객 156만 명 경제효과 1,949억 원, 예술인 134명 지원으로 문화경제 전환
- 진주시, 유등 제작·보관시설 '유등빛담소' 착공(뉴시스, 2026.01.21.)
  - 진주시는 유등 제작·보관시설 '유등빛담소'를 착공해 유등의 창작·보존·전시를 잇는 연중 관광 거점을 조성

○ 문화복지 예산 집행·시설 한계로 체감 낮아...역외 문화소비 구조 고착

- 문화누리카드 시행 13년, 순수예술 이용 미미(경상일보, 2026.01.19.)
  - 울산 문화누리카드 이용 21만 5,897건 중 도서·영화·교통이 대부분, 공연·전시 이용은 전체의 0.1% 수준
- 인천시민 '역외 문화소비' 한눈 판다(경인일보, 2026.01.19.)
  - 인천은 관람률 72.8%로 높지만 공연장 69.6%가 소규모여서 역외 문화소비가 심화

○ 한국 사회 갈등, 정치 대립과 경제 양극화로 집중

- 정치·이념 갈등이 절반...한국 사회 갈등, '정치 대립 - 경제 양극화'로 압축(시사오늘·시사ON, 2026.01.20.)
  - 정치이념(49.7%)과 경제적 양극화(28.8%)가 사회갈등의 78.5%를 차지해, 한국 사회갈등이 이 두 축으로 수렴되고 있음
- Z세대는 왜 '영포티'를 조롱하나...BBC도 주목한 한국 세대 갈등(주간조선, 2026.01.19.)
  - BBC가 최근 1년 확산된 '영포티' 밈을 조명, Z세대의 조롱을 세대·경제 격차가 낳은 갈등의 상징으로 분석

○ 초고령사회 가속 속 노인 공공공간 축소 논란...배제 아닌 공존·주체성 재설계 과제

- 탑골공원 폐쇄, 종묘광장 밀어내기... "노인은 나무 만도 못해"(한국일보, 2026.01.21.)
  - 탑골종묘 일대는 '성역화·미관'을 명분으로 노인 공간을 반복 축소해왔으며, 배제 대신 자율적 운영과 주체성 존중 필요
- 아기 울음 커져도...'초고령사회' 가속화(배경이코노미, 2026.01.15.)
  - 합계출산율 0.8명으로 반등했지만 고령인구 1,084만 명(21.2%), 연 50만~60만 명 증가로 초고령사회 가속

○ 청년을 관리하는 정책, 청년을 키우지 못하는 구조

- 예산 있으나 나마...'청년문화예술패스' 2년째 반쪽 집행(아시아경제, 2026.01.19.)
  - 25년 예산 229억 중 112억 미집행, 이용률 86.1%에도 집행률 51.2%로 2년째 구조적 한계
- 청년 34세로 늘려놓고 통계는 29세...엇박자 난 정책 기준(주간조선, 2026.01.22.)
  - 청년 기준은 34세로 확대됐지만 고용 통계는 29세 유지돼 정책 대상과 성과 지표 간 괴리
- 승진시험 경쟁률이 0.2:1..."공공기관 승진기피 심각"(YTN, 2026.01.19.)
  - 공공기관 35곳 중 7곳서 승진 의사 없음 70%↑, 한전KPS 승진 경쟁률 0.2:1로 승진기피 심각

○ 정부출연연 감사체계 일원화 추진...26개 기관 통합감사 법안 발의

- 유동수 의원, 정부출연기관 감사 일원화 법 발의(기호일보, 2026.01.14.)
  - 경제인문연 26개 기관 감사 기준 불일치 해소 위해 통합감사 법안 발의

## 1. 주요핵심 이슈

### ① '확산형 K-컬처의 체류·학습 단계 진입

- “콘텐츠 소비 → 방문/학습 → 체류”로 전환되는 흐름이 명확

☞ 국가 호감도 8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어학연수생 5만8,764명과 TOPIK 56만 명 응시로 학습·체류 수요 확대

### ② '재정 확대' 신호 VS '재원 확보' 난맥

- 총량·산업금융은 커지지만, 현장(기초·지역)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재원 통로는 불안정

☞ 문화예산 9.6조가 국정전략으로 제시됐지만 추경은 난망하고, 콘텐츠는 7,318억 펀드로 확대 추진

### ③ 수도권 '광역 문화경제 축' 강화와 지역 문화 산업도시 경쟁

- 수도권은 광역통합 투자, 지역은 K컬처 산업도시로 인프라 구축 중

☞ 문화가 도시·산업 전략으로 들어오면서 “수도권 축 vs 지역 문화 산업도시” 구도가 강화

### ④ 공간·공연·축제·관광 정책의 '체류형' 전환이 대세

- 공간·공연·축제·관광은 '단발 방문'에서 '체류'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 대응 이어져

☞ 밀양(1,000억), 순천(320억), 남해안(통영 1.14조·거제 1.5조) 투자와 군항제(3.27~4.5)는 관광을 체류형으로 전환

### ⑤ '지방소멸 - 교육축소 - 재정격차'가 문화정책의 바닥을 흔들

- 청문화의 확산 전략이 작동해도, 인구·교육·재정 기반이 무너지면 지속이 어려워

☞ 청소년 전출(충남 7,984명), 비수도권 77% 소멸위험, 혁신도시 14곳 중 9곳 인구감소, 경북 학생 1만246명·학교 35곳 감소와 수도권 지방세 집중(61.5조)은 지역 붕괴

## 2. '지속' 영역에서 경고로 읽히는 신호들

### ① 예술인 권리 및 안전망 하락과 무력화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021년 3.5% → 2024년 2%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021년 3.5% → 2024년 2%

### ② 문화복지 체감 취약

- '문화복지=소비 보조'로 고착, 순수예술·현장 향유로 연결이 약함

☞ 문화누리카드는 이용 21만5,897건 중 도서·영화·교통에 집중돼 있으며, 순수예술 이용은 0.1%에 그침

### ③ 청년정책 대상-지표-집행의 불일치

- “있는데 못 쓰는 예산”, “대상은 넓혔는데 성과는 좁게 측정”하는 구조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예산 229억 중 112억이 미집행돼 이용률 86.1% 대비 집행률이 51.2%에 그치고, 청년 기준은 34세로 확대됐으나 통계는 29세를 유지해 정책과 지표 간 괴리

## 3. 키워드 요약

### ① 확산 키워드

- 호감도(82.3) / 유학생·연수(5만8,764) / TOPIK(56만) / 체류형(1,000억·320억·1.14조·1.5조) / 문화지구·진흥지구 / 펀드(4,990억·7,318억)

### ② 지속 키워드

- 산재보험(3.5→2) / 문화복지(0.1%) / 청년정책(229억 중 112억 미집행, 51.2%) / 재정격차(61.5조, 27.4조 vs 6.7조) / 폐교(36곳) / 학급(307)·학교(35) 감소 / 소멸위험(77%)

## 4. 한 문장으로 정리한 핵심 진단

: 확산(호감도·유학생·체류형 투자·산업금융)은 숫자로 강화되지만, 지속(권리·복지·청년·지역기반)은 숫자로 취약해지는 흐름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공유되고 있다. K컬처는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되었다는 확신이다. 국가 호감도 82.3%라는 수치, 외국인 어학연수생 5만 8천 명 돌파, K-공연과 전통미술의 글로벌 성과는 이 확신을 뒷받침한다. 한국 문화는 소비되고, 방문을 이끌며, 학습과 체류로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 확신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 예산 확대, 콘텐츠 펀드 조성, 문화지구 지정, 체류형 관광 전략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문화가 산업·도시·외교 전략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확신의 표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이 확신은 구조를 바꾸겠다는 확신인가, 아니면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확신에 머무르는가.

기초예술과 지역 문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문화예산 9.6조 원이라는 총량과 달리, 지역문화 현장은 예산 가뭄 속에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 추경은 요건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만 키우고, 기금 운용 변경이나 예비비 전용 같은 우회적 해법만 거론되는 실정이다. 공연·미술·축제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정산·노동·권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문화는 커질 것'이라는 확신은 분명하지만, 지역문화와 창작자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공간 정책을 둘러싼 확신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유희공간 재생과 문화지구 확대, 체류형 관광 전략은 지역에 새로운 활동과 방문을 불러들이며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어 있던 공간이 문화 거점으로 전환되고, 문화가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 자원과 투자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역사별 논란 속 정책의 흔들림, 지방의 인구 유출과 기반 약화라는 불안도 커진다. 폐교는 늘고 청년은 떠나며, 문화는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인구 감소 이후를 관리하는 임시 수단으로 호출되기도 한다. 이는 문화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문화가 지역의 마지막 카드가 되고 있다는 불안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가 지역의 삶과 정주를 어떻게 지속시킬지에 대한 보다 긴 호흡의 판단이다.

문화복지와 사회 통합의 영역에서는 확신의 공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화누리카드의 순수예술 이용률은 0.1%에 불과하고,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공공문화 공간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청년정책 역시 기준과 통계의 불일치 속에서 낮은 집행률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지만, 문화가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난 한 주의 문화예술 관련 기사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누구를 위해 확신할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K-컬처를 지속시키겠다는 확신이라면, 그것은 예산의 총량이 아니라 창작 노동에 대한 존중, 지역의 자율성, 일상 속 접근성, 그리고 권리와 복지를 함께 설계하려는 태도로 증명돼야 한다. 지금은 그 확신의 실체를 묻고 있는 시점이다.

K컬처는 이미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필요한 확신은 하나다. 이 문화가 성장할수록, 사람과 지역도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제도로 구현될 때, K컬처는 비로소 일시적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